

도의회, 도 내년도 예산 5조 6744억 확정

도교육청 예산 2조 7684억 규모 가결
5분 발언 고향사랑 기부제 입법 강조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는 13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도의회는 이날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도교육청의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모두 가결했다. 이날 확정된 강원도 예산은 5조 6744억원, 도교육청은 2조 7684억원 규모다.

이날 5분발언에서 권혁열(강릉·자유한국당) 부의장은 “오징어가 사라지는 것은 동해안 경제 붕괴로 연결된다”며 “중국어선삭질이 조업방지와 함께 중국산 오징어에 대한 최고율 관세부과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재웅(춘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도형 빅데이터 산업정책, 국가스마트시범도시 조성 등 대응을 위해 도청 기획조정실내 전담 TF조직을 만들어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13일 열린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병희 도교육감이 교육청 예산안 통과에 따른 감사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영

심영섭(강릉·자유한국당)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과정에서 지역농축수산물 특산물의 답례품 제공이 무산된다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입법을 강조했다.

이문희(원주·) 의원은 “교육예산이 무상급식 지원에 사용되면서 교육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비용을 도교육청에만

부담시키지 말고, 도와 해당 시·군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평우(인제·) 의원은 “개헌안에 농업인 권리, 농업의 다원적 가치,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조항을 담아야 한다”며 “먹거리 기본권 등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내년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일정을 감안, 통상 2월에 진행하는 첫 임시회를 1월로 당겨 개최한다. 김여진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 회장, 연탄 5000장 기탁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 회장이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3일 강릉 연탄은행을 방문해 연탄 5000장을 기탁했다.

오 회장은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지난 9월 춘천연탄은행에서 개최된 ‘2017 춘천연탄은행 13주년 기념 재개식 및



나눔 봉사 발대식' 겸 연탄봉사상 및 감사패 시상식에서 연탄은행전국협의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발주자 불공정 행위 ‘참는’ 건설사… 15%만 “적극 대응”

충남지역 중소건설업체인 S사는 철도 시설공단의 부당행위로 손실을 봤다며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다. 공단이 추정가격의 10%에 육박하는 PS(잠정금액·Provisional Sum) 항목을 과다 책정해 공사비를 부풀린 뒤 나중에 전액 환수하는 바람에 수익원의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문도 두드렸지만 만족한 해결책을 듣지 못했다. 결국 이 회사는 민원을 취했다. 회사 관계자는 “민원 내고 소송 가봤자 결국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2차 피해만 클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설사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설사들이 실제 보상받는 것보다 향후 불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나, 발주처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일단 참는 게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종합건설사 125곳, 전문건설사 150곳 등 총 275개사를 대상으로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종합건설사의 64.6%는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 행위 경험 정도가 ‘많다(많음+아주 많음)’는 회사도 28.1%였다.

김영덕 건설연 연구위원은 “공공발주기관의 자체 정화 노력과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여전히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분

건설연, 종합건설사 125곳 설문

전체 64.6% 불공정 행위 경험
피해분야 ‘계약금액’ 가장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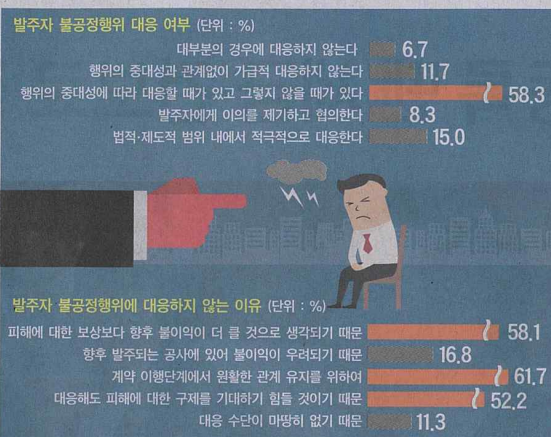
적극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61.7% ‘원활한 관계 유지’ 꼽아
“불이익 우려” 응답도 절반 넘어

부당행위 근절 어려운 원인으로
공공공사 공사비 책정제도 지적

야로는 ‘계약금액(67.9%)’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건설사업 단계 중에선 ‘시공 단계(47.7%)’에서 불공정 행위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피해 건설사 가운데 ‘법·제도 범위 내에서 적극 대응한다’고 답한 업체는 15%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대응 여부를 정한다’는 답변이 58.3%로 가장 많았다. ‘가급적 대응하지 않는다(11.7%)’, ‘대부분 대응하지 않는다(6.7%)’까지 포함하면 피해업체의 76.7%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계약이행 단계에서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61.7%)’, ‘피해에 대한 보상보다 향후 불이익이 커서(58.1%)’, ‘대응해도 피해에 대한 구제를 기대하기 힘들어서



(52.2%) 등의 순이었다.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응답도 11.3%나 됐다.

김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는 건설업체는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며 “발주자와의 마찰을 우려하거나 구제 수단에 대한 믿음이 적은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공공공사의 공사비 책정 제도를

지목했다.

건설사의 63.8%가 ‘예정가격제도, 표준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 제도의 문제’를 첫 손에 꼽았고, 이어 ‘발주자의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전가(44.8%)’, ‘국가 차원의 제재·통제장치 부재(37.9%)’도 주요 이유로 봤다.

불공정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발주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50.6%)’가 1위의 불

명예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공사 등 중앙정부기관(23.0%)도 불공정 행위가 잦은 발주자로 지목됐다.

건설공사의 발주 단계에선 ‘예정가격과 소산정(47.3%)’이, 계약 단계에선 ‘공사비 관행적 삭감(42.9%)’이, 시공 단계에선 ‘발주자 귀책사유’의 공기연장 간접비 미보상(46.0%)이 단계별 대표 불공정 행위로 파악됐다.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는 준공 단계에서도 계속됐다. ‘각종 이의신청에 대한 불인정, 보복조치(23.5%)’, ‘하차담보 책임기 간 부당 설정(21.0%)’ 등이 대표적이다.

건설사들은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적정공사비 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81.9%가 ‘건설공사비 산정제도, 입찰찰 제도 등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손실보상의 현실화와 발주자 책임 명시(52.0%·중복 응답)’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 연구위원은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선 공사비 산정 제도, 실효성 있는 불공정 행위 근절 제도, 발주자의 책임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